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6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2016. 1.

국 토 교 통 부

목 차

I. 일반현황	1
II. 2015년 성과 및 한계	4
III. 2016년 정책여건	10
IV. 2016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12
1.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13
2. 집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30
3. 살기 좋은 생활공간을 만들겠습니다.	42
4.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겠습니다.	50
5. 미래를 준비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59
V. 기대효과	66

◆ 법률 119개, 대통령령 127개, 국토교통부령 150개

법률 (합계)	기획 조정실	국토 도시실	주택 토지실	건설 정책국	수자원 정책국	교통 물류실	항공 정책실	도로국	철도국
119	1	33	30	7	6	19	9	4	10

산하 공공기관

◆ 총 24개 기관으로 공기업 9개(시장형 2, 준시장형 7), 준정부기관 5개(위탁집행형), 기타 공공기관 10개

구분	계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2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7	한국토지주택공사(이재영), 한국수자원공사(최계운), 한국도로공사(김학송), 한국철도공사(최연혜), 한국감정원(서종대), 주택도시보증공사(김선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김한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	한국철도시설공단(강영일), 한국시설안전공단(강영종), 교통안전공단(오영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김병수), 한국국토정보공사(김영표)
기타 공공기관	10	주택관리공단(주)(안옥희), (주)한국건설관리공사(김원덕), 코레일네트웍스(주)(김오연), 코레일로지스(주)(김명열), 코레일관광개발(주)(방창훈), 코레일유통(주)(장주식), 코레일테크(주)(백종찬), (주)위터웨이플러스(김중해), 항공안전기술원(이경태), (주)해울(정욱수)

II. 2015년 성과 및 한계

1. 주요 성과

(1) 주택시장 활력 회복

-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배제, 재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등 주택 제도 전반에 걸친 규제 개선으로 시장자율기능 회복 유도

*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합리화 등

- 매매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회복국면에 진입

* 매매가격 상승률 : 9.6%('06) → 0.1%('13) → 1.6%('14) → 3.5%('15)

** 거래량(만 건) : 108.2('06) → 85.2('13) → 100.5('14) → 119.4('15)

(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기반 구축

- 행복주택(3.8만호 사업승인) 등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호 공급(준공)하고 주거급여*를 본격 도입하는 등 서민 주거지원 강화

* '15.7부터 주거급여를 도입하여 80만 가구(중위소득 43% 이하)에게 평균 10.8만원 지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5.8)하고, '15년 목표치인 1만호를 초과하는 뉴스테이 1.4만호 공급(영업인가 기준)

(3)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

- 녹지·관리지역 공장 증개축 완화, 복합용지제도* 도입,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정비(1,200건) 등으로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 천안 LG생활건강 산단 : 1조 840억원 생산유발효과, 충북 진천산단 : 분양률 30 → 100%

- 물류단지 총량제를 실수요검증 중심으로 전환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 및 중·소규모 물류단지 등의 도입기반 마련

(4) 창조경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창조경제)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에 착수('15.6,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건축물 정보(2.8억건)를 전면개방하는 등 창조경제 구현의 토대 마련
 - (지역활력) 투자선도지구 선정(영천 등 4개소), 패키지형 도시재생, 지역거점 프로젝트(행복도시·새만금) 추진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공공기관 지방이전 본격화*로 10개 혁신도시 거주인구('15년 9.3만명)·지역인재 채용률('15년 12.8%) 증가 및 지방세수('15년 3,972억원) 확대
- * '15년 41개 기관 이전으로 수도권 소재 154개 기관 중 136개 기관(88%) 이전완료

(5) 가뭄 및 홍수 대응능력 확충

- (가뭄극복) 충남서부권의 유례없는 가뭄극복을 위해 댐 긴급운영(18개 중 9개), 댐-보-저수지 연계, 절수 지원제, 보령댐 도수로('15.10) 등 추진
- (홍수대응) 댐 건설(성덕댐 준공, 봉화댐 고시), 하천정비(69곳), 부처협업을 통한 도시하천 홍수방지대책 수립(4곳 착수) 등 선제적 대응

(6)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건설현장) 예방형 안전관리 및 발주청의 역할강화 등으로 건설 분야 사망자수가 2년 연속 감소('13년 567 → '14년 486 → '15.9월 344)
 - (생활공간)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15.12)하고, 준 다중이용 건축물 도입 등 건축물 유형별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시행('15.9)
 - (교통·도로) 졸음쉼터(50개소) 등 도로인프라 개선, 국민대토론회, 안전 운전체험교육 확대시행 등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년 연속 감소
- * 교통사고사망자수 : 5,392명('12) → 5,092명('13) → 4,762명('14) → 4,650명 이하('15 잠정)
- (철도·항공) 노후시설개량(4,694억원) 등으로 철도안전지표*가 개선되었고, 사고시 대처법을 알려주는 항공안전체험교육장 구축('15.4)
- * 열차사고 건수 : 6('13) → 9('14) → 4('15.11), 1억km당 사망자 : 16.8('13) → 14.3('14) → 13.3('15.11)

(7) 교통서비스 만족도 제고

- (사용자 중심) 교통카드 전국호환 확대, 수요응답형 버스, 고속버스 모바일예약, 자동차 온라인 등록제, 우회국도안내(40개 구간) 등 추진
 - 자본 재조달을 통해 3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저렴한 하이패스 행복단말기 보급, 도로점용료 인하 등 이용자부담 완화
- * 평택-시흥 6.5%, 인천공항 13%, 용인-서울 10% 통행료 인화로 총 1조원 경감
- (소비자 보호)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중고차이력 공개, 정확한 연비제공, 택배 배송정보 제공, 항공이용자 권익보호방안 마련 등 추진
 - (교통약자 보호) 장애인 등을 위한 저상버스(723대)·콜택시(290대) 보급,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인천공항 간편출입국서비스 제공('15.3)

(8) 빠르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확충

- (교통) 광역환승센터 구축('15.10 부천송내역), BRT 확대('15.12 대전-세종 전용도로개통), 대중교통전용지구 개통('15.4 부산동천로), 공영주차장 확충
- (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결정('15.11) 및 경인선 민자 지하화 확정, 88선·울산-포항·충주-제천 등 개통으로 고속도로 연장 4,205km 달성
- (철도)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15.4) 및 포항연결선('15.3), 경부 고속철도 대전·대구 도심구간('15.7) 개통 등으로 이용시간 단축
 -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9호선 2단계 개통('15.3), 별내선 착공('15.12), 대구3호선 개통('15.4) 등 광역·도시철도 확충
- (공항)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등 3단계 인프라 확충('15.12 현재 공정률 46.7%) 및 지방공항 인프라 확충방안 마련('15.11 제주제2·울릉, '15.12 흑산)

(9) 국토교통 분야의 해외진출 지원기반 확대

- (해외건설) 20억불 규모 코리아 해외 인프라펀드(KOIF) 조성('15.10),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GICC, '15.11)를 통해 건설외교 강화

- (세계 도로대회) 제25회 세계도로대회('15.11)를 통해 양자면담 26회, MOU 4건 체결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48명의 장관관 등 112개국 대표단 및 역대 최대 규모인 연인원 4만 8천명 참석

- (세계 물포럼) 제7차 세계 물포럼('15.4)의 성공적 개최*로 **국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관급 선언문 및 실행로드맵 마련

* 정상급 인사 9명, 장·차관급 80명 및 역대 최대 규모인 168개국, 총 4만 6천명 참석

- (유라시아 심포지엄) ASEM정상회의 후속조치로 5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여 **유라시아 교통망 연계전략** 논의('15.9)

(10) 국토교통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

- (공간정보산업) 국가공간정보의 **민간활용**을 확대('14년 3,800만건/월 → '15.11, 2억건/월)하고 **공간빅데이터 시범서비스** 개시('15.11, 15종 DB)

- (물류·자동차) 물류기업 **청년채용 박람회**를 개최('15.9)하고, 자동차 **대체 부품·튜닝부품 인증제** 도입('15.1) 및 **자율주행차 상용화** 방안 마련('15.5)

- (철도산업) 경쟁입찰로 **신규노선** 운영자 선정·협상('15.5~), 철도공사 물류부문 책임사업부제 도입('15.4) 등 **철도산업 발전방안** 본격 추진

- (항공산업) 인천공항 환승경쟁력 제고방안('15.5), 지방공항 활성화방안('15.7) 등 선제적 정책으로 **메르스 등 악재에도 고성장**(여객 9.3% ↑)

(11) 남북 SOC 연결 등 통일시대 준비

- (계획) 도시·교통·산업을 망라하는 **한반도국토발전기본구상**을 수립('15.12)하고,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전략** 수립('15.6)

- (도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착공('15.10), 문산-남방한계선은 조사설계 완료, 국도 31·43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착수('15.1)

- (철도)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역~군사분계선, 11.7km) 착공('15.8)

2. 미흡 사항

(1) 서민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증가

- 저성장·저금리 지속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전세공급이 감소하여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15년 전세가격 상승률은 4.85%로 최근 3년 평균치 3.9%보다 다소 높은 수준

- '09년 이후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74%**(‘15.11)를 기록

(2) 대도시권 교통혼잡 지속

- 전세난·생활권역 확대 등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중교통분담률은 담보** 상태이며 **교통혼잡도** 가중

* 대중교통분담률 : 42%('10) → 43%('14), 도시혼잡비용 : 19조('12) → 20.6조('14)

- 혼잡이 집중되는 **도시부 도로투자 확대**에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재정 제약으로 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확대 등 **제도화에는 한계**

* 국비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동부간선도로 등 광역도로 3개 사업에 164억원 추가 지원

(3) 안전에 대한 국민불안 상존

- (건설안전) **재해율***은 **他산업에 비해 아직도 높은 수준**이며, 가설 구조물·타워크레인·소규모시설 등 **취약분야 사고****도 지속 발생

* 건설현장 재해율('14) : 건설업 0.73% > 전체산업 0.53%

** 사망체육관 지붕붕괴('15.2), 용인 교량상관 붕괴('15.3), 부평 타워크레인 전도('15.9) 등

- (철도안전) **노후시설 개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차량 노후화**에 따른 잦은 운행장애(연 300건)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차량교체에 소극적**

* 시설개량 완료에 연간 5,000억원 투자시 19년, 7,400억원 투자시 10년 소요

- (항공안전·보안) 항공교통량* 및 이용객 급증에 따른 항공사 안전 장애, 기내 불법행위 증가** 등 항공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신뢰 미흡

* 항공기 운항횟수 : 36.8만회('10) → 45.9만회('13) → 52만회('15.11)
* 기내 불법행위 발생건수 : 155 건('10) → 192 건('12) → 354 건('14) → 369건('15.10)

(4) 다양한 분야에서의 갈등관리 미흡

- (건설) 업역 유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합·전문 업역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공사대금 체불 등 불공정관행도 지속적으로 발생
- (수자원) 사전검토협의회 운영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문정·영양·달산) 및 취수원 이전(대구·경북, 부산·경남) 관련 지역갈등 지속
- (교통) 광역버스의 노선 조정·중차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인·허가 및 요금조정권 등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있어 적극적 추진에 애로

(5) 국토교통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미흡

- (부동산산업) 지속적 규제개선에도 성장이 더디고*, 리츠시장도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 보다는 사모리츠 위주(97%)로 운영
* GDP 대비 부동산 및 임대업 비중(한은) : 8.7%('05) → 8.0%('10) → 8.0%('14)
** 주요국 상장리츠 시가총액('15년, 조원) : 미국 1000, 일본 100, 싱가포르 59, 홍콩 33, 한국 0.1
- (해외건설) 여전히 중동지역 플랜트 도급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기획·설계 등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분야의 역량 부족
* 중동 : 50%('11) → 40%('13) → 36%('15), 플랜트 : 73%('11) → 61%('13) → 57%('15)
- (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ICT 융복합·新기술 기반의 미래 자동차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미흡

Ⅲ. 2016년 정책여건

1. 대외여건

-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중국·신흥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의 침체로 우리경제의 대외여건 개선효과는 제한적

*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IMF, '15.10, %)

	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	일본	신흥국	중국	브라질	러시아
2015년	3.1	2.0	2.6	1.5	0.6	4.0	6.8	△3.0	△3.8
2016년	3.6	2.2	2.8	1.6	1.0	4.5	6.3	△1.0	△0.6

-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공급과잉으로 인한 저유가 상황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2. 대내여건

가 경제여건

- 민간소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반면, 수출은 신흥국 경기불안 등의 대외변수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경제성장률 전망 : 2.7%('15) → 3.1%('16), 경상수지 전망 : 1,120 억불('15) → 980 억불('16)

나 국토여건

- (국토이용) 대규모 개발수요 감소, 도시·산단·건물 등 집단 노후화, 지역경제 침체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저하 등에 대한 대안마련 필요
- (기후변화) 이상기후 심화에 따라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요구가 증대되고, 국제사회의 탄소저감 노력도 지속강화 예상

* '15.12 파리 기후변화정상회의 : '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0% → 37%로 상향

- (미래대비) 동북아시아 선점을 위한 경쟁력 있는 개방형·네트워크형 국토전략 및 국토교통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 요구

다 주거여건

- (주거안정) '소유→거주'로의 인식변화로 임차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세는 감소하고 월세는 증가하는 전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 지속 전망

* 임대시장 월세비중 : 33.9%('12) → 39.3%('13) → 41.0%('14) → 44.2%('15)

- 1·2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에 따른 가구분화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주택수요가 다양해지고, 주거복지에 대한 수요도 지속 증가

- (주택시장) 공급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계 부채 관리강화 등에 따른 수요위축으로 시장 하방리스크 상존

* 주택건설 인허가 : '15년 누계 76.5만호로 전년(51.5만호) 대비 48.5% 증가

라 교통여건

- (교통수요) 수도권 과밀화 및 광역화로 광역도시권의 통행량 및 교통 혼잡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5년 현재 전체인구 77% 대도시권 거주, 전체통행의 76% 도시권內 발생

- 1인 가구 증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여가·관광통행 확대(연 5.3% ↑) 및 자동차 등록대수 지속증가(연 3.7% ↑) 예상

- 아·태지역 중심의 꾸준한 항공수요 성장세 속에 중국의 공격적 투자*, 일본의 동경올림픽 대비 노선 확대 등 국가간 경쟁 심화

* 북경 제2공항 건설('19), 중대형 여객기 C919 개발('15), 세계 항공정비시장 7% 점유

- (新기술) IT와 전통 운송수단이 결합한 신규서비스 등장이 가속화 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新시장* 선점경쟁도 본격화 전망

* 자율주행차 시장점유율 전망 (전세계 판매량 기준) : 4%('20) → 41%('30) → 75%('35)

IV. 2016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 정책목표 】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국토공간 경쟁력 강화 / 국민 삶의 질 제고 / 미래 선도

2016년 5대 주요과제 추진

주요과제 1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주요과제 2	집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주요과제 3	살기 좋은 생활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주요과제 4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요과제 5	미래를 준비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토교통의 미래전략도 착실히 준비

주요과제 1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1. 국토공간의 경쟁력 강화

가 도시권 경쟁력 강화

□ 지역 성장거점의 획기적 지원

- (규제프리존 도입)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입지규제 등 핵심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규제프리존 도입 추진
 - 지자체 제안 입지·산업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지침 등을 개정하고, 전략산업 사업화 공간 제공 등 범정부적 패키지 지원
- (혁신도시 활성화) 남은 18개 기관의 단계적 이전을 추진('16년 8개, '17년 10개)하고, 주거(1.7만호 입주)·교육(6개교) 등 정주기반 적기 공급
 - 혁신도시 내에 조성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15년 12% → '16년 15%)하는 등 지역 활력 제고
- (기업도시 활성화) 그간의 제도개선 결과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연계 강화 및 기업 대상 간담회·컨설팅 추진
 - * 수도권 제외 광역시·충청권 입지규제 폐지, 최소개발면적 완화(330만→100만㎡) 등
- (새만금 활성화) 지역활력과 수출의 견인차가 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 추진
 - * 유망 앵커기업 및 선도적 개발사업자 지원, 기업의 인허가 절차 지원 전담관 도입 등

□ 혁신형 기업입지 확대

-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 건설('17.下 입주), 벤처캠퍼스용지 사업자공모('16.下) 등 창조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본격 조성

- (도시첨단산단) 판교 모델을 he도시첨단산단에 확산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특화산업과 연계한 기업지원허브 조성방안 마련
 - 1차지구(3개소) 착공, 2차지구(6개소) 개발계획 수립('16.12) 등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3차지구(김해·천안·청주)는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 (지역특화산단) 신규 특화산단은 국가산단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16.12)하고, 既 개발 중인 6개 국가산단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강화
- (기능융복합) 산단내 저렴한 산업용지에 대학 등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등 산·학·연 협력기반 조성
 - 산업·주거·문화 융복합을 위해 택지지구·혁신도시에도 산단개발 허용

□ 도시·지역정책 상호연계 강화

- (생활권 연계강화) 투자선도지구 등 부내의 각종 도시권 개발사업 공모시 지역행복생활권과 연계한 평가·환류시스템 강화
- (도시권 연계) 지자체가 거점형 지역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권 내 중소도시간 기능적 연계 및 지역특성화 방안 포함 유도('16.1~)
- (KTX경제권 활성화) 부내 협업을 통해 KTX경제권 유형별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 등의 정책과도 연계 강화
- (낙후지역 투자활성화) 경기 동·북부 등 낙후지역의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추진

나 거점간 교통 네트워크 강화

□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망 구축

- 스마트 하이웨이 구현과 혼잡개선을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착공('16.下)하고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민자적격성조사 착수('16.2)

* 서울-성남: '16년말 착공, 성남-안성: '17년말 착공, 안성-세종 '16년 민자적격성 → '20년 착공

- **고속도로 6개 노선**(상주-영덕, 광주-원주 등 241km), **국도 58개 구간**(고군산 군도 등 497km), **광역도로 5개 사업**(인천서구-김포 등) 등은 연내 완공
- 미연결된 고속도로 **노오지 분기점을 연결**, **하이패스 IC**(5개소) 신설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도로망을 효율적으로 활용

□ 지역간 2시간대 연결 목표 철도망 확충

- **(고속철도 수혜 확대)**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개통('16.8), **호남고속철도 2단계*** 본격추진과 함께 **인천·수원**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 * 광주송정-고막원은 설계 마무리후 착공('16.下), 고막원-목포 구간은 조속한 협의
- **(일반철도 고속화)** 거점 간 일반철도 고속화*와 평창올림픽 지원을 위한 **원주-강릉선**('17.12 개통) 및 기존선 **고속화** 등 추진
 - * '16년 (개통) 성남-여주 복선전철, 부전-일광 복선전철, 진주-광양 복선화
- **(경전철 활성화)** 저렴하게 건설·운영할 수 있는 경전철(자기부상열차, 노면전차 등) 활성화로 다양한 수요에 대응
 - * 인천자기부상열차 개통('16.上),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16.5, 입법예고)

□ 개방적·경쟁적 항공 네트워크 구축

- **(항공자유화)** 국민편의 제고와 국적항공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대륙별**(중국·유럽·남미 등)·**단계별 중장기 항공자유화 추진전략** 수립('16.上)
- **(경쟁촉진)** 운수권 제한 등으로 1~2개 항공사만 취항중인 노선의 운수권 추가 확보 및 **신규노선 개설·배분**을 통해 시장경쟁 촉진
- **(관광활성화)** 2016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공항별 특화 항공-관광 연계상품***을 개발하고, 민관합동 **항공-관광발전 협의체** 구성('16.3)
 - * (인천공항) 환승기준 24 → 72시간 확대('15.12)에 맞춰 의료·쇼핑·문화 연계상품 개발 (지방공항) 중국 무비자 환승공항과 연계한 지역별 항공-관광 연계상품 제공
- **아시아 3개국 올림픽 개최도시**('18년 평창, '20년 도쿄, '22년 베이징동계) 간 특별전세기 운항을 협의하고, 중국 등과 **정기노선 개설** 지원

- **(경쟁력강화)** 국적사의 항공기 임차비용 절감을 위한 **항공금융제도 도입방안**을 마련('16.12)하고, **운수협정*** 등 항공사간 협력 적극 지원
 - * 두 회사가 특정노선에서 코드쉐어 및 항공권 판매망 공유 등을 통해 간접운항체계 형성

□ 효율적 공항인프라 구축

- **(지방공항)** 국내선 터미널 리모델링(김포, ~'17), 국제선터미널 1단계 증축(김해, ~'17.1) 등 **공항시설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제고 추진
- **(소형공항)** 주민 교통편의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울릉·흑산도 소형공항** 설계 및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타당성 검토 추진
- **(新공항)** 영남권 신공항은 외국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확충 방안을 마련('16.6)하고, **제주 제2공항은 예타조사** 시행('16.下)

□ SOC 투자효율화 방안 마련

- **(제도개선)** 경제성(B/C) 외 **균형발전·안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다양화하고, **혼잡개선·생활인프라** 등에 **우선순위** 부여
- **(집행효율화)** 예산편성시 현장 최일선까지 **집행 가능성**을 점검하여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부진사업**은 집행실적을 **중점관리**
- **(민자활성화)** 재정한계를 감안하여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같이 **다양한 방식의 민간자본활용 확대**
 - * 서울-세종 6.7조원, 신안산선 3.9조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3.6조원 등
- **(중장기계획 내실화)** 시설투자 중심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종합교통계획**으로 전환하고 부문별·지자체별 교통계획 재정비 추진('16.2~)
 - 도로교통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도로망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도로망계획** 수립('16.6)
 - 철도망의 역할을 정립하고 병목·미연결구간 해소 등 효율적 철도망 구축을 위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16.上)

다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기반 마련

□ 토지이용체계 유연화

- (용도지구) 불필요하거나 유사 지구는 **통폐합·정비**하고, **신규수요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구를 신설('16.12)
- (비도시지역 개발) **보전관리지역**의 경우도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범위 확대('16.9)
-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소규모 창업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적 지원** 등을 위한 건축물 용도분류 세분화('16.12)
 - * 30㎡ 이하 소규모 사무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입지규제 완화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활용

- (관리체계) 공공성·수요·공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 체계**(7개 시설군, 53개 시설)를 정비하고, 필수시설 존치필요성도 검토
- (활용촉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집행계획** 수립여부를 조사하고 **해제신청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 마련('16.12)

□ 건축행정의 투명화·효율화

- (숨은규제정비) 건축인허가 관련 **지자체의 임의규제나 불합리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고, **건축심의 모니터링** 추진
- (서비스평가) 전국 240여개 기초 지자체에 대해 **건축행정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점검 실시
 - * 규제현황, 허가기간, 허가반려, 건축사고 등 객관적 평가지표

□ 국민체감형 규제개혁서비스 제공

- (규제비용총량제) 총량제 시행('16.3, 총리실)에 따라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해당 **규제비용에 상응하는 폐지·완화규제** 동시 발굴

- (현장소통강화) 업종별 협회, 지자체,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규제 개혁협의체**를 상시운영하여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마련

* 건의사항 청취 → 수용가능성 1차 검토 → 지원단회의 → 장관 주재 규제개혁점검회의

2. 국토·교통·물류산업의 재도약

가 부동산 산업

□ 리츠(REITs) 활성화

- (상장 활성화) 위탁리츠 등의 **상장요건**(매출액·영업익 등)을 **완화**하고, 우량 공모리츠에 **기금지원**(‘16.9) 및 **ISA**(자산관리계획) 등 **세제혜택**추진
 - *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선진국 리츠는 대부분 공모상장 형태이며 세제 등도 지원
- (대형화·다각화) 주식투자제한 등을 완화하여 **앵커투자자**가 참여하는 **대형리츠**를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母子리츠** 등 유형 다각화
 - * LH·연기금 등이 앵커가 되는 신규 공모형 리츠를 대표 브랜드로 육성 가능
- (해외진출 확대) **호텔리츠** 등의 **해외투자 지원방안**을 마련('16.12)하고, 싱가포르·호주 등 **리츠 선진국과 정례협의회**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 부동산거래 선진화

- (거래안전) **에스크로**(대금보장제) 활성화, **무등록 중개거래 원천차단** 등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방안 마련('16.12)
 - * 부동산거래 관련 분쟁 연평균 27,816건, 중개사고 연평균 172건('08~'13년)
- (거래편의) 투명하고 편리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보급하고('16 시범사업 → '17 전국확산) 금융·등기 등 **관련 서비스 연계** 추진
- (정보공개) **신고대상**을 **분양계약**까지 확대하고 허위신고 등에 대한 검증·조사를 강화하며,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도 공개*
 - * 실거래가 공개 : 아파트('06) → 전세주택('12) → 분양권·오피스텔·토지('15) → 상업·업무용('16)

- 실거래가를 활용한 가격공시 기반 마련 및 지가동향 조사체계 전면 개편을 통한 통계·평가의 신뢰도 향상

□ 부동산산업 경쟁력 강화

- (융복합) **他업역간 연계**(네트워크형)를 통하여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우수한 **시범사례** 발굴·인증(‘16.12)
* 예시 : 컨설팅업 + 임대관리업 + 중개업 + 감정평가업 네트워크 → 종합서비스인증
- (전문성 강화) 일자리와 직무교육이 연계되도록 산업분류 개편방안 (영업판매-부동산 → 부동산)을 마련하고, **부동산 산업의 날** 지정(‘16.12)
- (신시장 발굴) **무형재산** 등의 **평가기법**을 발전시키고, 개도국 등에 지적·보상·감평·신도시, 주택금융·보증 등의 **제도수출** 추진

나 건설 산업

□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

- (입찰제도 개선) 운에 좌우되는 **적격심사제**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발주자의 실질심사** 강화(‘16.12)
-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가격 외에 시공능력과 사회적 책임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본격 시행(‘16.1~, 소속·산하기관 약 10조원)
- (생산체계 혁신) 대규모 공사부터 생산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중소기업은 **직접시공** 강화(‘16.6, 기본계획 수립)
- (보증제도 개선) 과도한 저가공사에 대한 보증거부를 강화(거부 낙찰율 상향)하고 **부실기업의 고액보증**에 대한 심사강화(‘16.9)
- (모니터링 강화) **공사실적관리**를 세분화(30개 업종별 → 세부공종별) 하고(‘16.11), **부실기업 조기경보시스템**의 적발기능 강화*(‘16.10)
* 부실기업 점검범위를 기능사까지 확대하고, 적발업체는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조치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불공정관행 개선) **하자담보 책임기간 세분화***를 추진하고(‘16.12), **시공능력평가 검증** 강화 및 신규·법위반 업체 윤리교육 실시(‘16.7)
* (예시) 세분화 : 교량 → 받침장치·교면포장, 신설 : 하천공사·수문 등
- (대금체불 최소화) 국토부 산하 공사현장에 하도급·자재 등 대금 지급현황을 **상시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시행(‘16.6)
- **상습체불업자***는 **명단공표**(‘16.11) 및 **입찰시 불이익**을 주고, 발주자가 상습체불 하도급자에 **계약변경·해지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 최근 3년간 2회이상 체불로 처분을 받고, 체불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

□ 건설분야 기술경쟁력 강화

- (기술평가방식 개선) **턴키** 등 기술형입찰 평가시 총점차등 확대, 평가위원 전문성 검증 등 **기술변별력** 강화(‘16.9)
- **건설공사 및 용역 PQ**의 경우도 **통과업체수**를 실질평가 가능한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정성평가·기술점수** 비중 상향
- 글로벌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력 상위 업체를 선정하는 **건설공사·엔지니어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경험축적 및 제도개선 병행
- (건설기준·정보화) 제각각 운영되던 기준을 **설계·시공 2개 코드**로 통합·개편(‘16.6)하고, **성능중심 건설기준**의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 **BIM**(3차원 설계·시공) 활용을 도로에서 하천까지 확대하고, **건설공사 관리프로그램(WBS)** 개발(‘16.6) 및 건설 빅데이터 활용방안 마련
- (건설인력관리)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른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단계적 도입하고, 등급별 **역량교육** 및 **운영관리시스템** 구축(‘16.9)
- (연구개발) 선진국과 우리의 **건설기술 수준**을 **명확히 비교·평가**하여 해외진출 가능 분야 위주로 **R&D 전략** 마련 및 투자

다 공간정보 산업

□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공간정보기반의 행정정보(주민정보·건물 등)를 **국가공간정보포털** 및 **오픈플랫폼**에서에서 조회·편집·유통 가능토록 **원스톱서비스** 제공

-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컨설팅·교육·홍보 및 온라인커뮤니티 활성화로 **융복합 사업컨텐츠 발굴** 지원

- 부동산 교통 등 **공간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정책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연계한 **융합DB***를 구축하고 **종합 분석서비스** 제공

* (~'16) 부동산·교통·지역개발 등 45종 → ('17) 안전·보건·행정 등 55종

□ 미래형 공간정보 기술기반 구축

- (**인프라 운영**) **국토위성*** 정보센터 설립 및 **위성영상 수신·처리기술** 개발을 통해 위성정보와 산업정보가 융복합된 **新비즈니스** 전략 마련

* 우리부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해상도 50cm급 위성 2기를 '19~'20년 발사

- (**수치지적 확대**) 국민재산권보호를 위해 **도해지적**을 단계적으로 **수치지적으로 전환**하고, 지적재조사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 現국고중심의 재원구조를 지적측량수수료(기술료)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다각화

라 물류 산업

□ 효율적 물류거점 구축

- (**도시형 물류단지**) 도심내 전자상거래 물류거점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선도사업** 추진('16.6, 시범단지 5개소 선정)

* 물류유통 결합형 첨단산업의 업종 결정, 개발이익 환수기준, 물류시설 공동활용 등

- (**중소형 물류단지**) **비도시지역**에 실수요 물류기업(3개 이상)이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물류단지 제도*** 도입('16.10)

* 중소단지 규모 명확화(예 : 3만㎡이상), 개발절차 간소화 등

- (**실수요검증**)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실수요검증 종합 개선방안** 마련·시행('16.5)

□ 물류·유통 융합에 대응한 화물운송시장 개편

- 진입제도(現 허가제), 업종체계, 지입제 등 **화물운송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제도들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로드맵** 마련('16.12)

- 택배산업 성장, 유통업체의 물류업 진출 등 최근 **화물시장**의 변화를 반영·선도할 수 있는 **상생·협업방안**도 마련

마 자동차·도로

□ 미래 기술변화에 선제적 대응

- (**전기차**)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소**를 설치('16년 30개소, ~'17년, 총 100개소)하고, **전용번호판** 도입('16.6), 13인승 전기버스 도입 추진

- (**新수요**) **초소형 자동차**의 실도로 시험운행('16.6) 및 제도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성능·안전 관리방안도 도출('16.12)

- 자동차의 성능향상을 고려한 **도로설계속도 상향**(120→140km/h)을 위한 **설계지침**('16.12)과 혼잡해소를 위한 **지하도로 설계지침**('16.6) 마련

* 설계속도 10km/h 상향시 연관산업 일자리창출 등 연간 3,430억원 편익 기대

□ 자동차 新산업 활성화

- (**소량생산차**) 안전성 확인방법을 다양화(충돌시험 → 시뮬레이션) 한 **별도인증제** 및 미완성자동차 이용 **제작단계별인증제*** 시행('16.12)

* 미완성 단계(사시 등) 이후 추가 제작단계(냉동탑·구급시설 등 특정) 별 자기인증

- (튜닝산업) 전산망 구축('16.6) 등 튜닝부품 인증제 확대, 제작사 기반 튜너 육성('16.6), 튜닝 경진대회 개최('16.9) 및 튜닝업종 신설방안 검토
- (대체부품) 디자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업체간 디자인실시권 협약을 추진하고, 시험품목확대·감독강화 등 대체부품 인증제도 개선('16.12)

바 철도·항공

□ 철도산업 경쟁체제의 성공적 정착

-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 경쟁체제 정착의 디딤돌이 되도록 성공적 개통('16.8)을 위한 안전점검·시운전·운행계획마련 등 착실히 준비
 - 복수 운영자의 동일 노선 참여에 따른 운임 인하(기존 대비 약 10%), 서비스 차별화 등 경쟁에 의한 효과도 극대화
- (경쟁여건 조성)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업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입찰제 도입방안 등 마련('16.6)
 - * 가격담합·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 예방기준 마련, 갈등조정 협의체 구성·운영 등
 - 선로·시설 사용료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실제운행거리 등에 근거한 단위사용료체계 도입 및 역시설 공동이용기준* 마련('16.9)
 - * 공동사용 역시설의 비용분담, 시설관리자와 운영자 간 유지관리 책임범위 등
- (철도물류 활성화) 철도공사 물류부문 책임사업부제의 1년 성과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16.6)하고 미진한 부분은 개선방안 마련
 - 여객부문과 차별화되는 선로사용료 기준을 마련('16.9)하고, 대량 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유효장(화물열차 대파·적치공간) 확장 추진

□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 (강소기업 지원) 경쟁력 있는 기술 아이템을 발굴하여 국가R&D, 기술실용화, 베를린 철도산업박람회('16.9) 참여 등 지원
- (기술개발 지원) 기술의 시험·적용을 위해 종합시험선로를 구축 하고(~'18년, 오송), 선로사용료감면·우선구매·국제상호인증 등 지원
- (제도기반 구축) 철도차량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 하고 수요창출·기술개발 등 철도차량산업 육성전략 마련('16.6)
 - 점용기한 도래를 앞둔 서울, 영등포, 동인천 등 민자역사의 처리 방안에 대한 기준 마련('16.下)으로 민간투자 불확실성 해소

□ 항공산업 활력 제고

- (항공기제작) '13년 개발한 민간 4인승 항공기(KC-100)를 공군사관 학교 훈련기로 납품을 지원(23대)하는 등 본격 실용화 착수('16.2)
- (항공정비) 인천공항 LCC 공용격납고 등 인프라 확충, 정비·수리 기술 국산화, FTA를 통한 부품관세 면제 등 산업발전기반 마련
 - * 항공기 엔진 역추진장치 수리기술 개발('16~), 가스터빈엔진 부품정비기술 개발(~'17) 등
- (항공레저) 이착륙장 3개소 신규조성 착수, 다양한 행사* 개최, 항공레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항공레저 대중화 기반 마련
 - * 드론챔피언십 대회(2억원), 항공레저 스포츠제전(2.5억원), 청소년 항공교실(1.8억원)
- (틈새시장) 김포공항에 신속출입국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항공센터* 개장('16.上)으로 비즈니스항공기 이용수요 유치
 - * 시설 : 여객터미널(2,983㎡)·격납고(23,693㎡), 운영 : 한국공항공사·AVJET Asia
- 울릉('21)·흑산('20) 소형공항 개항 대비 소형운송사업 등록기준 개선* 및 공항이용료 감면 등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 추진
 - * 소형항공기준 : (현행) 좌석 50석 이하 → (개선) 최대이륙중량 등 추가기준 마련

3. 국토교통 분야의 해외진출 내실화

가 협업 및 해외 네트워크 강화

□ 협업체계 내실화

- (부내협업) 합동 수주지원단 파견,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강점 분야*를 융복합한 패키지사업 진출 지원
* 융복합 예시 : 도로+ITS, 교통카드+요금정산+ITS, 철도+지역개발, 도시+수자원+전력 등
- (기관협업) 해외개발사업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유·무상 원조 연계강화를 위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교통·인프라 협의체 운영
 - 공적개발원조(ODA) 자금과 수출금융을 결합한 복합금융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협약 체결('16.5)
- (해외협업) 세계은행(WB) 등과 협력하여 방글라데시 등에 개도국 도시개발·재정비 사업모델 제안('16.12)
 - 도시개발 수요가 높은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신흥 개도국과 해외 도시개발 협력 MOU 체결('16.4) 후 협력사업 추진

□ 인적 네트워크 관리 강화

- (DB구축) 초청연수사업·MOU체결·양자면담·국제행사 등 부내의 국제협력활동 결과를 DB화하여 이를 온라인으로 공유·활용
- (초청연수) 국가별 전략적 수주환경을 감안한 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대상자 선정, 각국 주재관들과 정보공유, ODA 연계강화 추진

□ 통상협상 적극 대응

- 한·중·일 FTA 및 TISA(복수국간서비스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등 다자간 통상협상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대응

나 해외건설

□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사업 활성화

- (투자펀드 활성화) 코리아 해외인프라 펀드(KOIF, 20억불) 활성화를 위해 운영지침 제정('16.3), 정례협의회 운영, 투자 로드쇼 개최(2회)
 - 민간자본의 해외건설펀드 참여확대를 위해 「해외건설특화펀드 및 집합투자업자 관리지침」 제정('16.9)
- (지원체계 강화) 인프라 분야 민관 공동진출 협의회(분기별)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획·운영 경험과 민간의 설계·시공능력 결합 지원
 -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F/S)시 리스크관리 및 금융투자 컨설팅, 수주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사후 모니터링('16.12)
 -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산단 개발 추진전략 마련('16.6)

□ 해외사업 관리 강화

- (모니터링 강화) 해외사업에 대한 수익성 등의 정보를 정부지원과 연계하여 관리(비공개)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 미수금 분석 등으로 사업별 수익성 악화를 사전 점검하고, 지역·공종별 수주잔고 및 해외건설 경기실사지수 등 지표 개발('16.12)
- (보증지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 하도록 해외 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증수수료 절감('16.1~)
- (인력양성)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관련 프로그램·인증제도 마련을 위한 지침 제정('16.12)
 - 해외건설 특성화 대학원 2곳 추가 개설('16.8),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개교('16.3), 해외 현장훈련(OJT) 프로그램 지원(300명)

다 수자원

□ 물산업 대외 경쟁력 향상

- (인력양성) 수자원전문대학원('13~, 성균관대)과 수자원공사 연계 및 유네스코 국제물연구교육센터 설립('16)으로 수자원 전문인력 양성
- (제도기반) 기술개발, 인력양성, 금융지원,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 기관설립 등을 담은 「수자원산업육성법」 제정 추진('16.12, 입법예고)
- (기술개발) 역삼투방식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에너지효율성 제고 및 UAE 등 진출 대상국과 공동연구·시험사업 추진('16~'20년, 270억)
- ICT와 기존 물관리 기술을 융합하여 누수사고, 수질오염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물관리 기술개발('16년, 47억) 및 단계적 적용 확대

□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

- 제7차 세계물포럼('15.4)의 후속조치로 한국 국제물주간('16.10, 대구·경북)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물 분야 국제교류*도 지속 추진
- * WWP(World Water Partnership, 역대 세계물포럼 개최국간 협의체) 등 활성화
- 수자원관리(태국-통합형, 페루-하천, 알제리-댐), 용수공급(UAE-해수담수화) 등 국가별 물관리 목표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수립 추진('16.6)

라 물류 산업

□ 물류기업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 (애로해소)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르는 통관·세제·투자 관련 현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의채널 구축*
- * 동남아·중앙아시아 등 신흥 물류시장 기업 진출수요 파악 → 현지 지원단 파견 등
- (전자상거래) 한·중·일 복합운송확대 방안(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 → 차량+트레일러, 탑차) 마련 및 협상('16.10)
- * 중국내 인기가 높은 화장품, 신선식품 등 대상으로 한 탑차 복합운송방식 시도
- (정보제공) 해외물류시장정보망을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국내외 물류시장 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16.12)
-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해운항만정보시스템 등

□ 중소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 (동반진출) 화주와 중소물류기업간 해외동반진출 매칭을 활성화('16.3~)하여 초기 리스크를 경감하고 중소물류기업에 틈새시장 제공
- (지원체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16.6) 물류스타트업에 대한 창업·홍보, 온라인협업 플랫폼 구축 등 지원방안 마련('16.7)
- * 국토교통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물류산업진흥재단 등

□ 인천공항 항공물류 활성화

- 인천공항 3단계 배후물류단지* 확보방안을 마련하고('16.11), 직구·역직구 공동물류센터 등 전자상거래 항공물류 활성화방안 마련('16.12)
- * 인천공항 물류단지 입주수요는 23.8만㎡로 가용부지 11.6만㎡ 초과
- 민관 합동투자지원단 구성·운영('16.1~)으로 글로벌 기업 배송거점 유치, 환적화물 확보, 화주·화물항공사 유치를 위한 활동 추진

□ 해외철도시장 진출 지원

- (수주지원 강화)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업별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수주지원단 파견을 통해 정부간 협력 및 현지홍보 강화('16.3)
 - * 동남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 등을 패키지로 방문, 로드쇼·세미나·언론인터뷰 등 추진
- 차량생산 정부보증,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 (신규사업 발굴) 정부간 협력(G2G) 강화, 주요국가와의 철도협력회의 개최, 고위급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주요사업 진출기반 마련

□ 해외공항사업 진출 확대

- (추진전략) 해외공항 개발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기존 컨설팅 위주에서 설계-건설-운영 등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확대
 - 사업유형별 수주전략, 금융조달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16.下)하고, 홍보를 위한 현지 로드쇼 개최('16.下)
- (추진체계) 국토부·외교부·KOTRA·금융기관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축('16.2)하고, 인천·한국 공항공사간 역할분담 방안 마련('16.上)
 - 대규모 공항개발 잠재력이 있는 동남아·남미 국가 등과 정기협력회의 개최 및 MOU 체결을 추진하여 해외공항개발 진출기반 마련

□ 항공분야 국제협력 강화

-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6연임* 달성 및 한중일 항공협력체계 구축 추진('16.下)
 - * 제5차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16.5) 개최 및 각종 국제회의 참여 시 집중적 선거활동
- 개도국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확대('15년 206명 → '16년 300명), ICAO 공동 교육과정 개설('16.11) 등 개도국 항공지원사업 확대

1. 서민 주거안정 강화

◆ '16년 총 113만 가구('15년 대비 1.3% ↑)에 서민주거 지원

- (공공임대) 11.5만 가구 준공(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주거급여) 최대 81만 가구 지원('15년 대비 1.3% ↑) * 주거급여 지급 기준
- (금융지원) 구입·전월세자금 최대 20.5만 가구 지원('15년 대비 5.1% ↑)

구분 (단위 : 만 가구)	'13년	'14년	'15년 (잠정)	'16년 (계획)
공공임대 준공	8.0	10.2	12.0	11.5
주거급여 수급	72.1	70.6	80.0	81.0
기금	10.0	10.0	8.5	8.5
대출	11.9	13.6	11.0	12.0
총계	102	104.4	111.5	113.0

□ 공공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속 공급

-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4.5만호 등 총 1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여 '17년까지 총 52.7만호 공급(준공) 추진
 - 이 중, 매입·전세임대 4.5만호(매입 1.4만, 전세 3.1만)는 수요가 풍부한 곳(수도권에 60% 이상)을 중심으로 신속(조기 입주자모집)하게 공급
- 일반가구 중심에서 대학생·신혼부부·고령자 등 특수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유형을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고령자) 건강관리 등 노인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을 당초 계획 (8개동, 650호)보다 확대하여 11개동** (약 900호) 공급(사업승인)
 - * 간호사·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며 건강관리, 식사 등 생활지원, 운동·여가 등 문화활동 지원
 - ** 위례, 분당목련, 수원광교, 세종신흥, 보은이평, 울산혁신, 안동운흥, 부산학장, 장성영천, 부안봉덕, 영월덕포 (이중 위례·분당목련은 '16.下 입주)

- (대학생) 수요가 많은 대학생 전세임대를 5천호로 확대('15년 4천호)
- (신혼부부) 신혼부부('16년부터 예비부부 포함) 전세임대 4천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방식 다양화

- (공공 리모델링) LH, 지자체 등이 노후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리모델링·재건축하여 1~2인 가구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2천호 신규공급)
 - * 오피스텔·기숙사 등을 소형 임대주택으로 활용가능토록 공공준주택 세부기준 마련('16.12)
- (사회적 주택) NGO(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 등) 등을 활용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16년 시범사업 500호 수준)
 - 시범사업은 LH 매입임대 운영권*을 대학,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제공하고 금융기관 대출시 HUG 보증도 제공
 - * (예) 기존 매입임대와 차별화하여 입주자격, 임대료 규제 완화 등 재량 부여
- (마을정비형) 낙후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도로·상하수도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16년 1,200호)
 - * '15년 선정 완료한 약 1,600호(13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주택사업계획승인 추진
- (다가구주택 실(室)별 임대)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가 본인 거주 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실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등록 허용
 - *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주택 등록시에도 기금에서 구입·건설자금 지원 추진

□ 행복주택 국민 체감도 제고

- (입주자모집·공급 확대) 입주자 모집을 '15년 847호(서울 4곳)에서 '16년 10,824호(전국 23곳)로 확대하고, 계획대로 3.8만호 사업승인

* 입주자모집 계획(안)

1분기 : 2,863호	2분기 : 1,906호	3분기 : 547호	4분기 : 5,508호
서울, 화성, 고양, 대구	서울, 충주, 대구	서울, 의정부, 성남, 안양	인천, 의정부, 대전, 광주 등

** 공급(사업승인) : '14년 2.6만호 → '15년 3.8만호 → '16년 3.8만호 → '17년 3.8만호

- (특화단지 조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혼부부(투룸형·국공립어린이집 등), 대학생(도서관·빌트인가전 등) 특화단지 조성

* (신혼부부 특화단지) 서울오류·하남미사·성남고등·과천지식·부산정관 5개 단지 5,690호
* (대학생 특화단지) 서울가좌·인천주안·인천용마루·세종서창·공주월송 5개 단지 2,652호

- (입주대상 확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외에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예비신혼부부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입주희망자의 청약편의 제고를 위해 행복주택 상설체험관을 운영('16.6)하고, 온라인 계약시스템 도입('16.7)

○ 도심내 행복주택 공급 확대

- 사업성 부족으로 방치된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을 지자체와 협업하여 행복주택 등으로 재건축
- 도시재생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에 행복주택사업 연계
 - * 도시재생사업(청주내덕), 주거환경개선사업(대전대동 2) 등
- 용적률 규제완화 등으로 노후공공시설과 행복주택 복합개발
 - * (사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과 행복주택 복합개발시 공공시설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공공주택법 시행령 개정'16.5)

□ 공공임대주택 관리 개선

- 입주기준 및 퇴거기준 재정비('16.6)로 부적정 계층의 퇴거를 유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순환률* 제고
 - * LH 영구임대(14만호) : 입주대기자 3.6만명, 평균 대기기간 1년7개월
- (기준정비) 소득분위별 소득·자산 분포, 입주자의 주거상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 개편
- (관리강화) 소득기준 초과 가구는 임대료를 할증하고,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퇴거시키되 경과조치 등 보완방안도 마련
 - * 자산은 기존의 부동산·자동차 외에 금융 등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평가

나 서민주거비 지원

□ 주거급여 지원 강화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가 과도한 가구에 대해 추가적으로 **종합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비 경감 유도
 - 주거급여 외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보증금 대출*** 등 지원 검토
 - * 현재 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LH 등 매입임대 입주자에게도 전세대출 허용
- 주거급여 지급한도인 **기준임대료***를 **상향 조정**(‘15년 대비 2.4% 인상, 월평균지원액 10.8만 → 11.3만원)하여 주거급여 지원 강화
 - *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 수급자 중 주택을 보유한 **장애인·고령자**의 경우 주택수선 외에 안전손잡이, 단차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 추가 지원(‘16년 약 8천가구)
- **주거급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부적정 수급**은 주택확인조사 확대시행(1회 → 4회) 등으로 엄격 관리
 - * 읍·면·동 사무소, 쪽방상담소, 종교단체 등 주거복지단체와 협의체 구성·운영

□ 맞춤형 서민주거비 금융지원 강화

- 최대 **20.5만호**에 저리의 구입(8.5만호)·전월세(12만호) 자금을 지원 하되, 전월세·자가가구, 신혼부부, 고령층 등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 (**전월세가구**) 버팀목대출(전세)에 **전세금 반환보증**을 도입, 월세 대출 지원대상 확대(현재는 저소득층만 지원), **부분임차*** 가구 전월세 자금 지원
 - * 독립된 주거가 아닌 일부 공간만 임차하는 가구
 - (**자가가구**) 디딤돌대출의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제도를 ‘16년 말까지 연장하고 **유한책임대출, 모기지신용보증** 제도 시행
 -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한도**(수도권:1억 → 1.2억, 지방:0.8억 → 0.9억)를 상향하고, 버팀목·디딤돌 **신규대출시 금리 0.2%p** 우대

- (**고령층**) 일정 소득·자산 이하의 유주택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 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제도** 도입

□ 주거복지전달체계 및 임차인보호 강화

- (**유도주거기준 고시**) 최저주거수준 이외에 국민의 적정한 주거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정책지표인 **유도주거기준**(주거기본법 명시) 고시(‘16.6)
- (**전달체계 효율화**) 공공임대·주거급여·주택금융 등 주거복지정보를 포괄하는 **마이홈 주거복지포털**(‘15.12 개통)을 통해 **원스톱서비스** 제공
 - 주거복지사, 지자체, NGO와 연계한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교육·육아 및 자립지원** 등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강화
- (**임차인 주거안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맞추어 **월차임전환율** 상한(現 6%)을 **인하**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명문화로 분쟁감소 유도
 - 또한, 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법률구조공단(의무)과 지자체(임의)에 설치 추진
-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확대**) LH, 지방개발공사 등의 전세임대 거주자에 대하여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확대*** 추진
 - *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시 보증금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금 인하

2.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스테이 활성화

◆ 민간임대특별법 시행('15.12)을 계기로 뉴스테이 사업 본격화

- '16년에는 '15년 대비 사업물량을 2배 수준 확대하고, '17년까지 13만호 사업부지 확보 (8만호 공급, 4만호 입주자 모집) 추진

구분	'15년	'16년	'17년	합계
사업지 확보	2.4만호	5만호	5.6만호	13만호
공급(영업인가)	1.4만호	2.5만호	4.1만호	8만호
입주자 모집	0.6만호	1.2만호	2.2만호	4만호

- 기 추진 중인 뉴스테이 외에 다양한 사업주체, 주택유형, 택지 등을 활용한 특화형 뉴스테이 모델 제시
- 재무적 투자자 등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주거서비스 강화 추진

□ 뉴스테이 공급확대

- (공급촉진지구) 1월에 8개지구 1.3만호, 4월에 4~5개지구 등 연내 2.5만호 내외에 대한 공급촉진지구 지정 추진
 - 보전가치가 낮은 도시인근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도심내 공업지역, '16년에 해제·완화되는 농업진흥지역 등 활용
 - 이중, 소규모(6만㎡이하) 도시지역으로서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어 기간단축이 가능한 부지 등 2천호에 대해서는 영업인가 추진
- (민간제안사업) 택지조성이 既 완료되어 촉진지구 지정이 필요 없는 민간제안부지 5천호를 확보하고, 이중 4천호에 대한 영업인가 추진
- (LH공모사업) 1만호 내외의 LH부지를 대상으로 사업공고를 추진하고, 1만호('15년 공모분 4천호, '16년 공모분 6천호) 영업인가 추진
- (정비사업) 사업자 공모를 통해 1만호 내외 부지를 확보하고, 9천호('15년 공모분 6천호, '16년 공모분 3천호)에 대해 영업인가 추진

- 용적률 상향을 통해 신탁사 등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하여, 장기간 사업이 정제된 정비구역에 뉴스테이 공급 확대

구 분	사업지 발굴	공급(영업인가)	입주자 모집
촉진지구 지정	2.5만호	0.2만호	-
민간 제안사업	0.5만호	0.4만호	-
공모사업	1만호	1만호*	0.6만호
정비사업	1만호	0.9만호**	0.6만호
합 계	5만호	2.5만호	1.2만호

* 공모일정상 '15년 영업인가가 되지 않은 4천호 포함, ** '15년 영업인가 되지 않은 6천호 포함

□ 뉴스테이 민간투자 확대 유도

- (펀드투자 확대) 재개발·재건축 등 1~2개 정비구역('16년 신규)의 일반분양분을 부동산펀드(순수민간자금)로 매입해 뉴스테이로 공급
 - * '15년에는 인천 십정구역에서 부동산펀드를 활용해 뉴스테이 3,000호 사업 확정
- (복합·특화개발)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내 범위*에서 분양주택 또는 수익시설과 복합개발을 허용하여 수익을 조기에 실현
 - *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경우에는 50%까지 복합개발 가능
- (母子리츠) LH 공모부지 대상 母子리츠 규모를 확대*하여 상반기 중 ABS를 발행하고, 민간제안부지에 대해서도 母子리츠 구성
 - * LH 2차 공모분 2천호 → 3차 및 4차 공모분 4천호 포함
 - 母子리츠에 대해 단계적으로 민간·기금 공동출자, 주식상장 등 추진
- (투자리스크 완화) FI(재무적투자자)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주택 도시기금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게 하여 인허가·준공리스크 해소
 -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낮은 공실률 등 임대운영이 안정적인 사업장은 임대기간중 지분매각도 허용
- (연기금 등 FI 투자유도) 보험사·은행 등 금융기관 위주로 구성된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45개 기관)」에 연기금 참여 확대

- 현재는 연기금이 1곳(지방행정공제)에 불과하나,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 건설근로자공제, 건설공제 등 **5개 연기금 추가 참여**(‘16.2)

□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강화

- **(맞춤형 서비스)** 입지와 입주자 특성 등을 고려한 주거서비스 제공
 -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육*, 교육, 헬스케어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가 제공되고, **설계가 특화****된 시범단지 마련
 - * 국공립어린이집(‘16년 150개소 공급예정)중 일부를 신혼부부 특화단지에 우선 배정
 - ** 고령자를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디자인, 육아를 위한 놀이방 설치 등
 - 입주민의 재능기부를 통한 커뮤니티 주거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재능기부자**(어학·학습지도·요리·악기연주 등)에게 **입주우선권** 부여
- **(서비스평가 강화)** LH 공모사업 평가시 현재 40점인 주거서비스 평가배점을 100점으로 상향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유도
 - **민간제안사업** 평가시에도 주거서비스 제공계획 및 입주민 편의 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
- **(우수주거서비스네트워크 인증)** 임대관리회사 등이 **네트워크*** 형태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우수주거서비스 네트워크**’ 인증
 - * 청소·세탁·경비 등 개별서비스 업체와 협업
 - 우수 인증업체가 자체 서비스 제공기반이 부족한 중견업체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공모사업·민간제안사업 평가시 가점 부여

□ 공급방식 다양화

- **(도심형 뉴스테이)** 사업여건에 따라 활용도가 떨어지는 **도심 은행 지점** 등을 **재건축**하여 직주근접 수요에 대응한 도심형 뉴스테이 공급
 - 4개 지구, **700호 규모**로 시범사업 추진(‘16.6)

- **(토지임대 뉴스테이)** 기금이 출자한 리츠(토지지원리츠)가 LH·민간 택지를 매입하여 뉴스테이 리츠(토지임대부 리츠) 등에 **저렴하게 임대**
 - LH 5차공모부지인 **동탄2(770호 내외)**에 시범공급(‘16.6)후 확대 추진
- **(협동조합연계 뉴스테이)** 리츠가 주택을 우선건설하고, 同리츠의 지분을 입주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인수하여 임대주택 활용**
 - 임대주택과 **소셜 주거서비스***도 연계 (**1천호** 규모 시범사업 추진, ‘16.9)
 - * 주거·보육·의료·여가 등 주거관련 서비스를 조합이 운영하여 공동체 활성화 도모
- **(한옥 뉴스테이)** LH 택지를 활용하여 **한옥 임대주택**과 저賃거리형 상가 등을 **복합개발**하는 한옥 단지를 조성
 - **400호 내외** (저賃거리 포함)로 시범사업 추진(‘16.6)
- **(매입형 뉴스테이)** 준공 또는 건설중인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뉴스테이로 공급하되, 관리비절감 등을 위해 **단지전체** 또는 **동별 매입** 추진

3. 노후주택 관리강화

□ 정비사업 활성화

- (제도정비) 유사 정비사업의 통·폐합 등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쉽게 **전면개편**(‘16.12)하여 분쟁감소 및 신속한 사업추진 유도

* 6개 정비사업 유형을 3개 유형(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으로 단순화

구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	저소득자 집단거주	단독주택 및 다세대 밀집	노후불량 건축물밀집	상·공업지역	공동주택	노후불량주택 밀집 가로구역
통폐합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소규모 정비 특례법으로 이동

- (복합개발)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택과 함께 **상업·문화시설** 등도 **복합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건축 용도제한 전면 폐지****

* 복합개발이 가능한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은 218개소(‘15.9 기준)

** (현재) 주택만 공급 → (개선)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 공급

- (리모델링) 1기 신도시 등의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력벽철거 일부허용***, **절차간소화** 등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 수직층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 다양한 정비사업모델 발굴

- (빈집정비) 도심내 빈집*을 철거·수리한 후 공공시설·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법**** 제정 등 제도기반 마련(‘16.12)

* 도심내 빈집 현황(아파트포함) : 27만호(‘00) → 42만호(‘05) → 45.6만호(‘10)

** 빈집정비 기본계획 수립, 정보체계 구축 및 사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 주거열악지역 또는 **붕괴위험**이 높은 빈집을 우선 정비하고, 빈집 **정보체계** 구축, 경찰청 등과 협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리모델링 대상주택을 **1,000실**(150호)에서 **2,500실**(400호)로 **확대**하고, 사업방식 확대 및 민간참여도 추진

- 원룸 등 1인 거주형 기존건물의 **부분 리모델링** 및 **점포주택**(1층 상가+다가구)도 사업대상에 포함하고, 인접 주택간 **통합 리모델링** 도입

- 리츠·부동산펀드 및 민간임대관리업자 활용, 입주자격 일반화 등을 통해 민간주도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

* 리츠·부동산펀드 등이 시중 자금 차입(시중은행 등)시 HUG 보증 제공

- (세대구분형 정비) 신규주택을 중심으로 마련된 제도를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간소화 등 추진

* 장기적으로 세대구분을 통한 임대사업모델 개발, 기금지원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노후주택 시설·환경 개선

- (공공임대) 15년 이상된 노후 임대주택 28만호의 **세대내부와 부대 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추진

* ‘17년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 추진

-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요율** 의무화를 추진(‘16.9)하고, 장충금 기금적립을 통해 수선재원을 지원하는 **공적관리방안** 검토

- (주택조합) 주택조합사업 증가에 따른 선의의 조합원 피해방지를 위해 **지역주택 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방안 마련(‘16.6)

4. 모니터링 강화 등 안정적 시장관리

- ◆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가며,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 유도**
- ◆ **EWS 및 통계개편** 등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부동산 EWS (Early Warning System) 고도화

- (EWS_조기경보시스템) 현재 사용중인 10개 내외*의 거시경제지표 외에 경제성장률 등 **거시변수** 및 지역별 가격·거래량 등 **미시변수 보완**

* 미분양, 전세가비율, 인허가실적, 주택거래활발지수, 단기유동성, 건설업 BIS 등

□ 주택통계 전면 개편

- (기존통계 신뢰도 제고) 인허가, 착·준공 등의 통계 시계열을 '05년까지 **확대**(현재는 '11년)하고, 수기로 집계하던 **임대주택통계 전산화**('16.7)
- (신규통계 생산) 전월세 **통합지수** 발표('16.2), **분양권전매 통계** 생산('16.4), OECD 등과 협력하여 **주요 주택지표 국제비교자료** 발표('16.7)
- (통계청 협력)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주거비 부담지수**를 발표('16.7)하고, 보급률 발표시('16.10) **등록센서스***의 가구·주택수 활용

* 통계청에서는 기존의 현장조사방식의 5년 단위 센서스조사에 갈음하여 '16년부터 매년 건축물대장·주민등록부대장·전기계량기 등 행정자료를 통해 센서스 조사

주요과제 3

살기좋은 생활공간을 만들겠습니다.

1. 도시재생사업 본격화

□ 지역맞춤형 도시재생모델 확산

- **13곳의 선도지역사업**('14년 착수)에서 지역특화 콘텐츠 도출, 일자리 창출 등 **성공모델을 가시화**하고 이를 신규사업으로 확산
- 선도지역사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최대 **33곳의 신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규모별·유형별 **활성화계획** 수립('16.12)
 - (대도시경제거점 조성) 기능이 쇠퇴한 이전 유휴부지, 폐항만, 철도 역세권, 노후산단에 경쟁력 있는 신규기능 도입(대구·인천 등 5곳)
 - (중규모거점도시 활성화) 원도심에 행정·상업·보건·문화 등 거점 기능을 확충하거나 관광수요·특화산업 등 유치(김천·충주 등 9곳)
 - (근린생활 환경개선) 노후주거지 재생,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소득창출 지원(광양·부천 등 19곳)
- 기업·공공기관 등과 함께 달동네 등 소외된 **빈곤지역의 환경개선과 일자리·자활** 등을 지원하는 **새뜰마을 사업** 추진('16.3, 17곳 내외 선정)

□ 민관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도시재생 촉진

- (도시재생) 주택도시기금을 청주·천안 도시재생사업에 **출자·융자**하는 등 **민관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창의적 도시재생 촉진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 사회적기업 등이 추진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에도 **대출보증** 지원(청량리·종로 시범사업)
 - 재생계획 수립·변경 **절차 간소화***, 대규모 민간투자 필요 구역에 대한 **민간의 계획 제안제** 도입 등 규제완화도 병행('16.12)

* 특별건축구역·경관협정·건축협정 등 의제사항 확대, 경미한 변경사항 허용 등

- (노후공공건물* 리뉴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행정시설을 **커뮤니티·상업시설 등과 융합**한 시범사업(4곳) 추진

*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은 약 4.4만동(국유 2.1만동, 2.3만동)

- (산단재생) 민간 **공모·제안제도**를 활용하여 민간사업자의 개발을 허용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산단재생리츠** 도입 추진
- 산단내 거점지역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선도사업**을 추진('16.12, 대전·대구 등)하고, 산단재생 **4차지구 3개소** 신규 선정

□ 지역역량 및 부처협업 강화

- (지역역량) 지역의 재생 주체로서 **도시재생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의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 (부처협업) 도시재생특위(총리)에 **분과위를 설치**하고, 해수부(항만재생)·복지부(근린재생)·법무부(치안·안전) 등 **부처간 협업모델** 지속 발굴
- (지원체계) 지자체 **컨설팅** 지원, 엄격한 **단계별평가제** 도입, 전문 **국가지원센터 설립방안** 마련 등 지원체계 개선('16.4)

2. 매력적인 국토환경 조성

□ 국토의 휴식·관광·레저기능 강화

- (용산공원) 역사·문화·생태가 어우러진 최초의 국가공원(243만㎡)에 담을 **콘텐츠를 선정**('16.6)하는 등 공원 조성계획 구체화
- (동서통합지대) **남중권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16.1), **선도사업**인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착수('16.4)
- (해안·내륙권사업) 관광거점 육성을 위해 지구 내 행위·시설제한을 완화하는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고 **시범지구 공모·선정**('16.下)

- 낙후지역 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해안권사업**(12개 1,043억)을 지속 추진하며, **신규 선도사업**(내륙권 1, 해안권 3)도 착수

□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경관 및 건축문화 창출

- (국토경관)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기본준칙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헌장제정위원회**를 구성('16.3)하고 **국토경관헌장(안)** 마련
- **판교창조경제벨리** 경관특화사업*, **평창동계올림픽 상징가로** 경관특화사업** 등을 통해 우수경관 형성의 모범사례 제시
- * 테라스형 건축, 적극적 식재녹화, 디스플레이 건물외벽(Media Facade) 도입 등
- ** (상징가로) 246억원, '15~'17, 국비50%, (경기장 진입로정비) 120억원, '16~'17, 국비50%
- (건축문화) 지역 우수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건축자산진흥구역**을 지정하고 **건축자산 조사 지원**('16.下)
- 한옥의 확산을 위해 **한옥마을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16.3)하고, **강릉한옥마을·동탄한옥마을** 등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

□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공원관리 혁신

- (개발제한구역)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의 본격 시행과 함께 **해제사업시 훼손지 복구대상 기준**(現 동일 시·군 10km) 등을 완화
- * 축사 등 건축물 난립으로 훼손된 지역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공공기여하는 경우 창고 등의 설치를 '17년까지 한시 허용
-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높은 주택개량, 난방문제 개선 등을 중심으로 **주민지원사업** 개편
- 중·소규모(30만㎡ 이하) **해제권한의 지자체 위임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단절토지 범위(1만㎡ 미만) 확대로 **자투리 토지 활용도** 제고
- (공원조성) **민간자본**을 활용한 다양한 공원조성 모델을 강구하고, **토지임대**를 통한 저비용 공원조성 방안도 마련

□ 머물고 싶은 수변공간 조성

- (수변공간 활성화) 한강 관광자원화를 위해 **우선협력거점사업*** (여의-이촌 3,981억)을 착수('16.6)하고, 하천내 **점용허가제** 개선** ('16.10 국회제출)
 - * 관광명소화 : 복합문화시설·테라스·보행브릿지 등, 자연성회복 : 천변습지·갯강복원 등
 - ** (현재) 공시지가 기준 일률 부과 → (개선) 공개입찰제 도입 등 탄력 부과
- **4대강** 수변공간은 **보·문화관**을 중심으로 문화부와 함께 문화장터·위터투어·수상레저 등 **권역별특화사업** 추진방안 마련('16.12)
- **댐** 주변공간을 체험·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안동댐·남강댐을 대상으로 국민 참여형 **생태·문화관광** 추진('16.10)
- (하천공간계획) 하천지구 세분화* 및 하천 거버넌스 도입을 통해 지역여건과 의견을 반영한 **국가하천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16.12)
 - * (종전 3개) 친수, 보전, 복원 → (개선 6개) 친수(근린·거점), 보전(특별·완충·일반), 복원
- (친수사업) 추진중인 사업(5곳)은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신규사업은 연구결과(~'16.6)를 바탕으로 **신규지구 지정** 검토

□ 시민이 즐겨찾는 국토·교통 박물관 건립

- (국토발전전시관) 반세기만에 고도성장을 이룬 **국토교통 발전역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전시관 건립(舊서울지방국토관리청 리모델링, '17 개관)
- (국립항공박물관) **항공역사를 체계적으로 전시·홍보**하고 현장연계 항공꿈나무 육성 등 저변확대를 위해 **항공박물관 건립** 착수
 - * 설계('16) → 착공('17) → 준공('18.下) → 개관('18.下)
- (국립철도박물관) 117년 **철도역사를 국민이 체험·공감**할 수 있게 하고 철도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철도박물관 건립** 추진
 - * 부지선정('16.9) → 예타('17~'18)→설계('19) → 착공('20) → 준공('21) → 개관('22)

3. 더불어 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기술개발을 통한 주택품질 향상

- (기술개발) 결로, 층간소음, 실내공기질, 누수 등 주택품질 개선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기술개발지원** 확대('15년 57억원 → '16년 75억원)
- (기준마련) 화장실 등 **설비부분의 소음기준**을 제정하고, **부위별 누수 예방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설계·자재산업의 기술개발 유도('16.12)
- (장수명화) 민간의 장수명 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용절감 기술연구**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16.12)
- (주택자재산업 육성) 유지보수가 잦은 주택자재에 대한 **규격화** 및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업체의 보수기술 표준화 및 향상방안 마련
 - 이를 위해 **주택자재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16.12)

□ 공동주택 입주민보호 강화

- (관리비 투명화)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및 감사기준**」을 제정('16.8) 하고, 전국단위 공동주택 **관리 비리신고센터** 설치 법제화('16.12)
- (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지정 및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16.8)

□ 공항주변 주거환경 개선

- 기존의 소음대책 사업 외에 **항공사의 자발적인 소음감소** 노력 유도 등 근본적 원인해소를 위한 **소음부담금 부과체계*** 개편('16.12)
 - * 항공기 운항시간대별·기종별·요일별 차등 부담금 가중치 적용 등 검토
- 항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항주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제도** 마련 착수
 - * 항공학적 검토 법정위원회 구성('16.6) 및 세부기준 마련 연구용역 추진

4.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극한 가뭄에도 안정적인 물공급 시스템 구축

- (댐건설) 지자체 추진 소규모댐(원주·봉화·대덕)은 차질없이 시행하고, 국가시행댐(문정·영양·달산)은 지역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추진
 - * 원주천·봉화댐 : 설계(~'16.12), 대덕댐 : 타당성조사(~'16.10)
- 지역이 희망하는 댐 건설을 위해 댐 희망지 공모제 도입('16.5)
- (공급능력 극대화) 댐 준공 이후 실측된 수문자료를 바탕으로 용수 공급 및 홍수조절능력을 재평가하여 댐 운영조정 등 개선방안 모색
 - * (완료) 낙동강수계 5개댐('14.7~'15.8), (진행중) 한강수계 3개댐+보령댐('15.9~'16.6) (추진예정) 금강수계 4개댐(대청·용담·부안·군위댐, ~'16.12)
- 댐·보·저수지 연계운전을 국가하천 전반으로 확대하고(4→12개강수계), 해수담수화를 통한 임해산단 공업용수 공급방안 마련('16년)
- (효율적 활용) 既 확보된 4대강 물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16.10), 하천수 허가제도를 개선하여 과다허가 및 무단취수 관리강화
- (예경보제 도입) 전국 대상으로 지역별 물부족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는 가뭄 예경보제 도입('16.3)

□ 홍수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도시하천 홍수대책) 기관간 협업을 통한 21개 취약하천 유역중합 치수대책* 수립으로 100년 빈도 이상 홍수방어 및 예산절감 추진
 - * (신규계획 수립) '15년까지 7개 하천 착수, '16년 3개 하천 착수 → '17년 계획수립 완료 (기존계획 조정) 11개 하천 유역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관리 지원
- (예보체계 강화) 사용자 중심 홍수정보 제공 및 예보 정확도 향상 등을 위한 홍수 예보체계 강화 마스터플랜* 마련('16.6)
 - * 홍수 예보지점 확대(국가하천 → 228개 지자체), 예측시간 6시간 확보(기존 3시간) 등

- (하천정비)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재수립('16.8)하여 지속적 정비를 시행*하고, 하천호안제품 안전성평가를 위한 인증제 마련('16.8)
 - * '16년 사업계획 : 국가하천 85곳 추진(10곳 준공), 지방하천 390곳 추진(65곳 준공)

□ 생활공간의 안전 강화

-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의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절차 및 체계를 구축하고 3~5개 산단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16.上)
 -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보강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도 마련('16.3)
- (지하공간) 특별법 시행('18.1)에 대비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16.12),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16.11)
 - *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안전영향평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규모·유형별 각 3개소
- 지하탐사반에 최신장비(2set)를 추가배치하여 확대 운영하고('16.2~), 지반침하의 사전징후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는 대국민 홍보 강화
- (건축물) 화재·폭설·지진안전 등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취약요소를 사전에 발굴하는 건축물 종합성능평가제도 마련
 - 불법 건축자재 사용을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공사현장에서 자재공장 및 유통장소로 확대 시행
 - 건축물 유지관리매뉴얼 마련('16.1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여 상시적 안전관리 문화 확립
 - 주로 공공건축물 등에만 적용되고 있는 무장애(Barrier Free) 디자인을 일반건축물의 내·외부에도 확대 적용하는 기준 마련

□ 현장중심의 건설안전 강화

- (관리체계 개선) 설계단계부터 시공 중 위험요소를 고려하고 준공 후 사업참여자의 안전역량을 평가·공개하는 세부지침 마련('16.5)

- 주요 건설사고 사례에 대한 원인분석 등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유형별·원인별 분석이 가능한 **사고통계 DB** 구축

- 저가낙찰 등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현장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불시점검**(현행 예고점검) 및 **고용부와 합동점검** 실시('16.2~)

* 저가낙찰공사, 위험공종을 포함한 공사, 사고이력이 있는 업체가 시공하는 공사 등

- (취약분야 관리강화) 취약 부분인 **가설구조물**, 소규모 공사의 위험 **공중**(5m이상 동바리, 2m이상 흙막이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16.3)

- 타워크레인의 검사요건 추가*, 검사주기 단축(2년 → 6개월) 등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16.9), **건설기계안전협의회** 운영

* 구조검토서 외에 기초부의 주요자재 제작증명서와 설치결과 증빙자료 등 추가

- 불량 건설자재의 유통 및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을 강화하고, 건설자재 **품질시험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정비

- (관리체계 정비) 현행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여 **급속한 노후화 대처** 및 **안전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종합개선대책*** 수립

* 시설물 관리시스템(FMS)과 부실진단 모니터링체계 재정비, 진단업체 일제 점검 등

- 안전처로부터 편입되는 **3종 시설물의 통합 관리**를 위해 관리체계 정비, DB 이관('16.12), 교육·홍보 등 **준비작업** 추진

- (성능중심 유지관리) 안전확보 중심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성능평가방식** 도입('16.6)

* 성능평가 매뉴얼 시범적용 : 도로·철도·하천·댐 (~'16) → 공항·항만·상수도 등 (~'17)

- (스마트 유지관리)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모니터링**으로 손상취약부를 미리 안전하게 보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적용** 추진('16.9)

- **굴착지반**, 붕괴위험이 높은 **취약시설물** 등을 계측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스마트 SOC 유지관리** 기반 마련

주요과제 4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1. 대도시권 출퇴근시간 단축 및 교통혼잡 완화

□ 교통수단간 연계강화 및 수요·공급의 효율적 관리

- (환승체계) KTX 등과 연계한 **광역환승센터**(수원·오산·지제역 등) 설치를 추진하고, 주요 **교통거점별 환승시설** 확충 방향 제시('16.12)

- 도시내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버스환승시설** 설치방안 마련

- (광역버스) 혼잡지역 대상 **M-버스 증설** 및 **굴곡노선 조정**('16.12) 등 운행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원·김포 등에 **2층버스** 추가도입('16.6~)

- 旣 착수한 대전역-세종, 부산 내성-송정 **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원-구로 광역BRT 등 신규사업 추진

- (수요관리) **교통유발 부담금**을 현실화하고, **교통혼잡 특별관리 구역의 지정기준**을 간소화하여 지자체별 시행 유도('16.12)

- (광역계획) 대도시권의 **교통축별·시간대별 교통수요**를 분석하여 공급 확대 및 수요관리 등 **생활권별 광역교통대책*** 수립('16.2~)

* 혼잡이 극심한 수도권 서부를 우선수립('16)하고 순차적으로 수도권 동부·남부 등 추진

□ 대도시권 광역철도망 확충

- (수도권) 일산~삼성(A, 37.4km), 인천~서울(B), 의정부~금정(C, 47.9km)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주요거점 110km/h 운행) 본격 추진

* A노선 : 타당성 분석후 RFP 착수, B노선 : 재기획 완료, C노선 : 메타후 기본계획 착수

- 신안산선(시흥~여의도, 49.4km, RFP), 하남선('14~'20), 진접선('15~'19), 별내선('15~'22) 등 도시철도망과 외곽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확충

- (지방) 기존 철도의 여유용량을 활용한 **대구권**(구미~경산, '16.12 착공), **충청권**(계룡~신탄진, '16 기본계획 수립) **광역철도** 등 추진

□ 도로교통 혼잡구간 개선

- (정체구간 감축) '17년까지 고속도로 **정체구간 30% 감축**을 목표로 **갓길차로제** 시행, **IC 접속부** 개선, **하이패스차로** 확대 등 추진
 - * 중장기 고속도로 정체개선 계획 수립('16.上)
- (교통정보 활용) 국가(ITS)와 민간의 교통정보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16.6) 및 국도·도심구간('16.10) **교통예보** 실시, **우회도로안내** 확대
 - ITS 감지기로 대기차량을 감지하여 국도의 신호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지능형 교통신호**를 단계적으로 확대
 - * '14년 시범사업 결과 교통소통 27% 증가, 신호위반 51% 감소 효과
 - 교통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여 도시부 교차로 **신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여 교통흐름 개선
 - 교통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육상정밀 GPS** 보급을 추진하고, 첨단교통수요의 분산을 위한 **교통정보·ICT 융합R&D** 착수('16.2)

2. 교통 서비스의 품질 제고

□ 교통서비스의 다양화·고급화

- (버스) 우등형 **시외버스**, **프리미엄 고속버스**('16.6 시범운영), **시외버스 왕복발권·지정좌석제**('16.4), **버스에매 외국어서비스**('16.12) 추진
- (차량공유) **카셰어링** 시범도시를 지정('16.9 MOU체결)하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도 카셰어링 도입 추진('16.12)

□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

- (버스·택시) **외국관광객** 등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 외국어 서비스 및 **통역앱 배포**, **중사자 친절운동** 등 **K-Smile 운동** 추진
 - * 버스·택시 등 릴레이 친절결의대회('16.3~), 통역 앱 배포·교육 및 친절기사 선발('16.6)
 - 지역여건에 맞도록 **총량기준**을 보완하고, 택시 **공동차고지 입지 규제** 완화 및 **차령기준** 합리화로 산업 경쟁력 향상('16.12)
- (자동차) **채납금 조회·납부**를 위한 **일괄압류해제서비스**를 제공('16.7) 하고, 대리인 신청 등 **자동차 온라인등록신청시스템** 개선('16.12)
 - 자동차 매매·정비·검사 등의 시설과 상업·문화시설을 복합조성하는 **자동차서비스 테마파크** 기본계획 수립('16.5) 및 시범단지 지정('16.10)
- (도로) 주차장 **하이패스 결제**('16.6), 휴게소 진입전 **혼잡도 안내***, 이용자 평가를 통한 **우수 휴게소음식** 선정·홍보 등 추진
 - * 영동선 여주휴게소 이용자 32% 분산효과, 8개소('15) → 14개소('16) → 20개소('17)
 - **푸드트럭**(4개소), **테마휴게소**(10개소) 및 **화물차휴게소**를 확대* 설치하고, 안전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중(重)차량 운행노선** 시범운영('16.10)
 - * 현재 휴게시설 82개소, '16년 8개소 추가 설치, '19년까지 100개소로 확대
 - **민자도로 중간요금소**(천안-논산 풍세요금소 등) **정차 없이 입·출구에서만** 통행권을 뽑고 결제하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Tolling)** 시행('16.11)
 - * 원톨링 시행을 시작으로 통행권을 뽑지 않고 고속주행 중에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스마트톨링(Smart-Tolling)**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20년 전면 도입
- (철도) **서비스평가** 범위를 연계교통 등 접근성까지 확대하고 조사 기간도 개선하며, 평가결과는 선로사용 등 운영자 **인센티브와 연계**
 - 버스·택시 **승하차장 연계**를 위해 접근도로 개량 등 관련기준을 정비('16.6) 하고, 울산역 등에 **복합환승센터** 추진

- (항공) 인천공항 출국장 조기오픈(6:30→6:00) 및 셀프체크인 확대*('16.11), 이동식 체크인 도입(20대, '16.7) 등 신속출국 지원
 - * 참여항공사 확대(12 → 15개사) 및 셀프존 내 셀프체크인기기 추가 설치(12 → 20대)
- 김해출발 인천경유 국제선 여행객의 추가보안검색 면제('16.6) 및 보안 검색 완료지역내 구입음료의 기내반입 허용('16.6)으로 승객편의 제고
-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설치 및 공항버스 투입 확대('16.12), 김포-인천공항 발권 및 수하물 연계 서비스 제공방안 검토
- 인천공항 간편출입국 서비스의 노약자 등 이용대상 확대('16.3)

□ 교통서비스 비용의 합리적 개선

- (버스) 10+1 상품권, 사전예매 할인, 5~10인 단체구매 할인, 뒷좌석 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요금제 도입
- (도로) 민간사업자와 함께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16.8)하고, 서울-춘천 자금재조달 협상 착수('16.11)
- (철도) 운임·요금 체계를 이용자 체감수준과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합리적·객관적 검토절차 도입 추진('16.7)
- (공항)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16.11)를 통해 공항접근 비용부담 완화

□ 교통소비자의 권익 보호

- (신차구입) 신차 구매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중대한 결함)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추진('16.12)
 - 결함징후 사전공개 의무화, 결함조사 진행사안 공개, 과징금 상향 및 위반사안별 차등부과 등을 통해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 유도
- (중고차거래) 가격정보 제공, 종사자교육 의무화, 상품용 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 등 중고차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16.10)

- (생활물류) 택배·이사 서비스의 품질제고를 위해 택배서비스평가 가이드라인('16.9) 및 이사화물 소비자권리 보호방안*('16.6) 마련
 - * 피해다발 이사업체 공개, 예상견적·계약서 작성법 등 이사 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등
- (철도이용) 승차권 취소·환불, 열차지연·장애 보상 등을 규정한 철도 운송 표준약관을 제정('16.9)하고, 철도교통소비자위원회 구성·운영
- (항공이용)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정('16.下) 및 항공교통이용자 보호협의회 구성을 통해 적극적인 피해예방 및 보호체계 확립
 -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서비스 평가·보고서 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다각도로 분석 및 공개하여 소비자의 맞춤형 비교·선택 지원('16.10)

3.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가 도로 안전

□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노후SOC 개선) 한정된 재원으로 노후도로 전체를 일시 개선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로 안전개선 시범사업 착공('16.1)
 - * (대상) 중부선 하남~호법 41km, 1,002억원 / 영동선 여주~강릉 145km, 3,551억원 (방식) 민간이 선투자하여 사업 시행 → 준공 이후 도로공사가 사업비·이자 지급
- (시설안전강화) 높은 주탑과 케이블이 있는 특수교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기준을 재정비하여 화재·낙뢰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
 - 100m 이상 모든 교량 내진보강 완료, 3km 이상 초장대 터널과 도시부 지하도로는 방재기준을 강화하여 특별 안전관리('16.12)
- (사고 예방) 졸음쉼터 24개소를 확충하고, 빌리지존, 회전교차로, 역주행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지속 확대, 국도 갓길 정비 등 추진

- 교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찾은곳·위험도로 110개소**를 정비하고, 사고위험도로 신고시 개선하는 **주민참여형 안전사업** 시행
- 야간·빗길에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고속도로 **고급도로 사용** 확대 추진

□ 교통사고 사망자 4,500명 이하 감축 노력

- **(중장기전략)**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13~'17) '16년 시행계획 마련('16.3) 및 **제8차 국가교통안전 5개년 기본계획**('17~'21) 수립('16.12)
 - 교통안전시설 뿐만아니라 문화·편의시설 개선 등을 모두 포함하는 **교통안전 선도도시 기본계획** 마련('16.6) 및 지자체 공모·선정('16.12)
- **(맞춤형대책)** 노인 안전교육 강화, 야광지팡이·조끼 등 노인 안전용품 보급 확대 등을 담은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16.11)
 - * 제8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반영후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확정
-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인증제** 도입('16.8), 어린이·청소년·고령자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 및 순회교육** 실시(분기별)
- **(사고대응강화)** 페터널에 **재난훈련장**을 구축('16.12)하고 체험교육 및 복합재난 훈련 72회 실시, 사고 **실시간 알림서비스***도 확대('16.9)
 - * 고속도로 사고정보를 스마트폰, 내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 사고예방과 우회유도

□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 및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강화

- **해외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외국인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독일·프랑스 등과 MOU** 체결('16.12)
-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운영기술 개발('16.1~),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17),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보급 확대*
 - * '16년 보급 계획 : 저상버스(340억 지원, 700대 추가), 장애인 콜택시(52억 지원, 264대)

- 자동차공제조합 서비스개선을 위해 감독기구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16.6)하고, 자동차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 준비('16.1~)

나 철도 안전

□ 2020년까지 철도사고 30% 감축 ('15년 대비)

- **(안전경영 유도)** 운영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안전투자공시 시범사업** 실시('16.下)
 - **(차량·시설관리)** 차량정비 **생애주기 이력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철도차량교체 중장기계획** 수립('16.10) 및 **노후시설 개량투자** 확대(4,750억원)
 - 시설 유지보수 성과평가를 실시('16.6)하고 집중작업시간도 확대
 - **(보안역량 강화)** 국제행사시 **거점역 중심**으로 보안검색을 시범도입하고, 국가중요시설(15개), 주요역(20개), 무인역(117개) 등에 **CCTV** 확충
- 2017년까지 철도역사 생활안전사고 30% 감축 ('15년 대비)
- **(안전설비 확충)** **스크린도어**를 전면설치(도시철도~'16년, 광역철도~'17년)하고, 사고가 빈번한 곡선 승강장에 **접이식안전발판** 집중설치(~'18년)
 - 경부선·호남선의 사고빈발 지역에 **방호울타리** 설치를 완료하고, 경찰청 등과 협업하여 **건널목 사고저감 종합대책** 수립('16.8)
 - **(무장애환경 구축)** 신설역사에 **무장애 인증기준**을 적용('16.10)하고, 기존역사의 교통약자 연속동선 미확보시 **엘리베이터** 설치추진(~'17년)

다 항공 안전

□ 빈틈없는 항공안전 대응체계 구축

- (위기대응 강화) 현장점검을 거쳐 **항행안전시설 장애발생대응 실무 매뉴얼**을 정비('16.6)하고, **공항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 실시('16.1~)
 - 항공사고시 골든타임 내에 인명구조, 화재진압, 환자수송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관합동 항공사고 종합훈련** 실시('16.10)
- (예방활동 강화) 항공사 맞춤형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개선안 마련('16.12), 현장 불시안전점검 강화, **노후 항공기*** 조기송출 유도 등 예방역량 제고
 - * 국적기 총 324대중 20년 초과 항공기는 총 16대 (KAL 3, AAR 10, 에어부산 1, 인천 2)
 - 시설안전·산업재해·구조소방 등 공항이용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공항안전지수**를 개발하여 조사결과 공표
 - LCC 증가에 따른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품질관리 체계 고도화, 운항·정비 인프라 구축 등 **LCC 안전운항 제고방안** 마련('16.4)
 - * LCC 규모 증가 : '10년 (5개사, 6만회) → '15년 (6개사, 15만회)
- (사각지대 개선)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레저스포츠** 부문에 대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안전제도**** 개편 추진('16.12)
 - * 경량·초경량 사고 발생건수 : 4건 ('12) → 4건 ('13) → 2건 ('14) → 10건 ('15)
 - ** 자격훈련, 기체검사, 비행규칙, 안전관리자 요건, 활공장 내 안전장치, 안전점검표 등
- (테러 대응) 테러대응 **조직·인력 확충**('16.12), **위협노선 점검 체계화** ('16.1~), **항공보안장비 일제정비** 및 신규장비 도입('16.1~) 등 추진

□ 항공안전 관리시스템 선진화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안전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위험요인 발굴, 안전지표 설정지원 등을 위한 **항공안전프로그램(SSP)** 고도화('16~'19)

- (**항공로체계 개선**) 중국방면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해소를 위해 **중국내 항공로 복선화** 및 **서해 항공로 신설** 등 추진('16.12)

* 한·중간 교통량 : 최근 5년간 연평균 10.8% 증가('10년 74,647대→'14년 112,592대)

-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교통량 사전예측을 통한 **지연방지**, 테러·기상악화 등 위기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통제센터 구축(~'17.6)
 - 항행시설 고장, 군사적 위급상황 등 위기사 **신속대응**(항로 재배정, 우회운항 등)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 (**조종인력 양성**) 조종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제트기조종사 양성 교육과정**('16.9, 부기장요원)과 **중장기 조종인력양성방안** 마련('16.10)
 - 훈련용 **비행인프라**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추진('16.3~'17.3)

주요과제 5

미래를 준비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1. 동북아시대를 선도할 미래비전 마련

□ 동북아시대 대비 교통·물류 네트워크 강화

- (교통)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 전문가포럼 및 제6차 GTI(Great Tumen Initiative) **교통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유라시아 협력체계 확대('16.6)
- (물류) 유라시아 지역의 물류정보화 현황, 기술개발 동향 등을 조사·분석하여 **유라시아 대응 물류기술 개발전략** 수립('16.10)
- (철도) 범정부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회원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노력** 지속
 - 유라시아 고속철도 진출을 위해 시속 600km급 **초고속철도 개발 방향설정** 등 대규모 국가R&D 기본구상 수립
- (공항) 10대 환승공항 도약을 위한 **2단계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을 도출하고('16.6), **공항복합도시(Airport City)** 조성('16.2 사업자선정)
 - 점증하는 동북아 항공수요에 적기 대처하기 위해 제2여객터미널 건설 등 **3단계 공항인프라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18.上 개항)

□ 국토종합계획의 미래대비 기능 강화

- (계획개념 재정립) 하위계획에 담겨진 내용을 수집·망라하기보다는 하위계획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정책방향 제시**에 주력
 - **지역계획 및 부문별 계획**에 대한 소관기관과 관계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공할 **정보의 범위와 주요 국토이슈** 도출('16.6)
 - * 정책방향(예: 신규개발 → 재생·관리)의 구체적 구현 과정에서는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 수립 유도

- (국토 모니터링 강화) 국토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과학적 전망**을 위해 국토계획 수립시 사용되는 현행 국토조사방식 혁신
 - 종합계획의 성과를 평가할 **핵심 국토지표 운용방안**을 마련('16.11) 하고, **격자기반 국토지표** 생산*도 활성화

* 국토기본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16.11) 및 표준 지표생산사양 고시('16.12)

□ 한반도 통일시대 체계적 준비

- (계획 수립) 한반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한반도 **통합철도·도로망 마스터플랜** 등 통일시대를 대비한 분야별 중장기 계획 마련('16.12)
 - * 통일국토발전위원회(국토부장관)를 구성·운영하여 부서간 협업·조정 강화('16.2~)
- (기반 구축)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월정리역, 9.3km) **복원**(~'17.11)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북한 기반정보 **통합 연계시스템*** 구축('16.12)
 - * 국토·환경·수자원 등 기반정보를 대상으로 하되, 분석·활용을 위한 플랫폼도 구축

2. 미래 기술변화에 선제적 대응

□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 (기반정보) **자율주행차**를 위한 **3차원 정밀도로지도** 및 무인비행 장치(드론)를 위한 **운항·관제용 3차원 지도** 구축
-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테스트를 위해 **실도로 시험운행**(('16.3), **시험 운행단지** 지정('16.7),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조성 추진('16.8)
 - * 자동차 센서기술, 전자지도, 위치측정 기술, C-ITS(실시간 돌발정보 감지) 등
- 세종-대전간 도로에 **C-ITS**(실시간 돌발정보 감지·통신기술) **시험서비스**를 개시하고('16.7), 자율주행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운영센터** 구축('16.12)

- (드론)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16~'17), 중간성과를 점검하여 공역·사업분야 확대 검토

* (사업모델) 물품수송, 산림감시,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해안선관리 등

** (시범사업) 공모를 거쳐 15개 시범사업자 및 5개 공역(부산·대구·고흥·영월·전주) 선정('15.12)

- 드론사업 자본금완화 검토, 안전확인 사업자 장기운항허가제 도입 등 활성화 대비 규제합리화방안 마련('16.12)

- 안전정보제공 웹서비스 구축 및 軍·국토부로 이원화된 비행승인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16.12)

□ 미래 新성장동력 분야 연구개발 확대

- (계획수립) 既 수립된 미래기술예측조사 및 중장기전략 등을 바탕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 R&D 종합계획('17~'26) 마련 착수('16.下)

- 개방형 기획과제 및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16.5)을 확대실시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하고 경쟁의 기회를 제공

- (연구개발) 미래의 新성장동력이 될 만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R&D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 미래융합합산단('16~'20, 170억원), 제로에너지주택('13~'17, 188억원), 공간정보 전용위성 탑재체('15~'20, 699억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 평가('16~'19, 180억원), 차로구분 정밀 위치결정 교통인프라('16~'18, 60억원) 등

- 미래물류 R&D로드맵('16.5), 자동차 중장기 R&D로드맵('16.10) 등 수립

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국토·교통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기반마련

- (제도개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도시의 재해취약성 분석지침을 마련('16.6)하고, 분석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16.12)

- 녹색건축, 장수명주택 등의 확산을 위해 용적률 등 인센티브제공이 용이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대폭 간소화*('16.9)

* (현행) 기초조사 → 주민공람 → 관계기관 의견조회 → 도시계획 심의 → 변경(개선) 도시계획 심의 → 변경

- (스마트도시 활성화) 現유비쿼터스도시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개편하여('16.9, 개정안마련) 스마트도시 확산 및 산업활성화 지원

- 각종 정보시스템 등과 U-City센터를 연계하고 중국 등 주요국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해외진출 기반 마련

* U-City 지원센터 지정 및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협의체 구성·운영

- BIM 설계기준·표준 라이브러리 등의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건축 빅데이터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를 통한 신규서비스 발굴 추진

□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물 확산

- (제도개선) 녹색건축 확산을 위해 인증제를 정비하고, 기부채납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16.12) 및 건축물 에너지성능의 시장가치화* 추진

*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등에 건물에너지 소비정보·관리비정보 등 반영

-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산업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환경부) 등을 활용한 제로에너지빌딩의 시장기반 수익모델도 마련('16.12)

- 성능기반 에너지설계기준 강화('16.12), 면적별 에너지사용량 홈페이지(K-apt) 공개('16.10), 제로에너지주택 시공방법·표준설계안 마련('16.6)

- (시범사업) 제로에너지 빌딩 확산을 위해 단지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행복주택·판교창조밸리 등에 패시브설계* 적용

* 고단열·고기밀로 에너지낭비 최소화('17년 패시브 → '25년 제로에너지 의무화 목표)

-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제로에너지 R&D 실증('13~'17.6, 노원구 국민임대 121세대)

□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 (로드맵 마련) 도시별 교통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고, 자동차·물류 등 교통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16.12)
 - '25년까지 항공기 연료효율 연평균 1.3%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항공사·공항공사별 온실가스감축 세부로드맵 본격 착수('16~'19)
 - * 공항 주기기 지상의 보조장비를 사용한 전원공급, 고효율 신형 항공기 도입 등
- (인프라 구축)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및 주차구역 신설, 수소버스 실증사업 등을 통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확대 유도('16.12)
 - 공항시설·주변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공항시설 범위에 친환경 에너지 생산시설 포함('16.6)
- (캠페인) 직업군별 맞춤형 경제운전(Eco-Drive) 교육을 실시('16.3~) 하고, 대국민 동참유도를 위한 경제운전 활성화 캠페인 확대('16.3~)

4. 일하는 방식의 혁신

□ 통계인프라 혁신

- (기존통계) 주택통계(임대주택통계 전산화), 국토·도시·건축통계(총량→격자기반 융복합), 기업물류비(조사체계 재정립), 교통수단별 통행량 등 개선
- (신규통계) 전월세통합지수, 건설계약통계, 교통혼잡지표, 구간별·시간별 도로속도, 기·중점별 철도여객수송실적 등 신설 추진
- (추진체계) 통계포털 이용편의성 개선, 통계전담인력 지정, 통계업무 담당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신설·운영 등 추진

□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체계 구축

- (조직체계 유연화) 핵심 국정과제의 성과창출, 국토교통 미래기능 확충을 위한 유연한 조직관리 시스템 구축('16.9)
 - * 유동조직제(가칭) 시행 : 저(低)성과 부서·정원을 신규 부서·정원으로 재조정
- (성과중심 평가체계) 국정과제 성과창출에 역량 집중을 위해 업무평가시 주요업무 평가배점 확대(70→80점) 등 평가체계 개편*('16.4)
- (조직문화 개선) 수평적·수직적 소통을 강화하고, 실·국간 협업 등을 통해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산('16.12)
 - * (개인간) 동호회·소통愛 Day, (부서간) 팀워크빌딩, (실국간) 미니워크숍 등

□ 정보시스템 효율화 및 보안 강화

- (정보시스템 개선) 행정지원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중요정책관련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 * '16년중 22개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고도화 등에 791억원 투입
- (사이버역량 강화)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한 중장기계획('16~'20)을 마련하고, 취약요인 모니터링용 이력관리시스템 구축('16.上)
 - 중요 시스템을 선별하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추가지정('16.12) 하고, 외부공격 및 악성코드 차단을 위한 보안관제시스템 확대('16.9)

□ 공공기관 구조개혁 지속 추진

- (부채감축)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부채감축을 지속 추진하여 부채규모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목표치*까지 축소
 - * (잠정목표) '16년 재무전망 대비 부채규모 49.5조원 감축, 부채비율 53% 축소
- (기능재편) 서비스 제고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해 핵심업무 위주로 기능을 재편하는 기능 재조정을 지속 추진하여 '16년과제* 완료('16.12)
 - * 관제의 독립성·공정성 확보(철도공사), 안전서비스를 위한 조직운영 효율화(도로공사) 등

□ 선제적 상시 갈등관리체계 구축

- (선제적 갈등관리) 주요 신규사업(500억 이상), 이슈가 예상되는 신규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 갈등영향평가** 의무화('16.上, 지침개정)
- (현안갈등 해결지원) 갈등이 발생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갈등조정 협의체 등 **갈등해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여 적극해결 도모
 - * 갈등조정협의체(이해당사자, 갈등전문가 참여), 제3자 조정, 민관합동기구 등
- (상시 갈등관리) **갈등관리위원회** 수시 개최, **갈등전문가** 상시 자문, **신속한 과제조정** 등 갈등상황에 따른 상시 대응체계 구축

□ 비리·부정 사전예방체계 구축

- 국고보조금, 안전시설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를 통해 **국가 재정 누수**, 생활밀착 **안전관련 비리** 등을 사전 차단('16.3~)
 - * 소속·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인사비리, 예산편법집행, 과도한 복리후생 등 중점점검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16.9)에 대비하여 직원대상 **청렴교육** 강화
-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기준 및 절차를 마련·시행**('16.1)하여 창의적 공직문화 조성

□ 홍보강화를 통한 정책실행력 제고

- (맞춤형홍보)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분기 1회), 정기 여론 조사(반기 1회) 등을 통해 국민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홍보 추진
- (공감형홍보) 정책수혜자가 **화자(Story Teller)**가 되는 홍보방식을 통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감형 정책 홍보 추진
- (뉴미디어강화) **모바일 중심(Mobile)**, **시각화(Visual)**, **실시간화(Live)** 등 미디어 환경변화를 반영한 홍보 콘텐츠* 개발·공급
 - * 드론 촬영 시스템, 사진이 있는 카드뉴스, 365일 SNS 소통 서비스 구축 등('16.3)

V. 기대효과

1. 지역경제

□ 공공기관 지방이전

- 공공기관 **지방이전**(누계) : **136개** ('15) → **144개** ('16) → **154개** ('17)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 **12.8%** ('15) → **15.0%** ('16) → **18.0%** ('17)

□ 혁신형 기업입지 확대

- 도시 **첨단산단**(누계) : **21개** ('15) → **24개** ('16) → **30개** ('17)
 - * (1차 지구) 3개소 개발 완료시 약 2조원 투자 및 8천개의 일자리 창출
(2·3차 지구) 9개소 개발 완료 시 4~5.5조원 투자효과 기대

□ 쇠퇴지역 활력 제고

- 도시재생/새뜰마을(누계) : **13/30개** ('15) → **46/47개** ('16)
- **산단재생**(누계) : **18개** ('15) → **21개** ('16)

2. 주거여건

□ 임대주택 공급

- (공공임대) '16년에는 **11.5만 가구**, '13~'17년간 **52.7만 가구** 공급
 - *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2년 5.0%에서 '17년 6.6%로 증가
- (뉴스테이) **5만호 부지 확보**, **2.5만호 공급**(영업인가), **1.2만호 입주자 모집**
 - * (사업지/공급/입주자모집, 만호) : 2.4/1.4/0.6 ('15) → 5/2.5/1.2 ('16) → 5.6/4.1/2.2 ('17)
☞ '15~'17년 13만호 부지확보, 8만호 공급, 4만호 입주자 모집

□ 서민주거비 지원

- (주거급여) **80만가구 10.8만원** ('15년) → **최대 81만가구 11.3만원** ('16년)
- (금융지원) 구입 **8.5만 가구 3조원**(이차보전 5조원), 전세 **12만 가구 4.5조원**

3. 국민안전

☐ 교통안전 개선

- '17년까지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4천명 이하**로 감축
: **4,650명** 이하('15 잠정) → **4,500명** ('16) → **4,000명** ('17)
- '20년까지 **철도 사망자수 30% 이상** 감축('15년 기준)
: 1억km 당 사망자 수 **13.3명** ('15) → **12.5명** ('16) → **8.5명** ('20)
- '17년까지 **항공운송분야 사고 50%**(과거 5년평균 기준) 감축
: 100만 비행횟수 당 사고건수 **3.3건** ('15) → **3.0건** ('16) → **2.66건** ('17)

☐ 생활안전 개선

- '17년까지 **D·E등급 취약시설물 33%** 감소 (1·2종 시설물)
: 1만개 당 **7.5개** ('15) → **6개** ('16) → **5개** ('17)

4. 교통여건

☐ 교통혼잡 개선

- '17년까지 **고속도로 정체구간 30%** 감축('15년 기준)
: **211km** ('15) → **170km** ('16) → **146km** ('17)
- '17년까지 **대중교통 이용인원 연간 1.6억명 이상** 증가
: **83.0억명** ('15) → **84.6억명** ('16) → **86.2억명** ('17)

☐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 **저상버스** 보급률 : **20.7%** ('15) → **22.8%** ('16) **7,449대** (총 32,552대)
- **장애인 콜택시** 보급률 : **92.9%** ('15) → **102.4%** ('16) (총 2,852대)